

## 11. 26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



# 보도자료

▶ 위기관리대책추진단장 김유진

TEL : 02-2110-7155

FAX : 02-502-6855

▶ 2008. 11. 25(화) 배포  
▶ 총 6 쪽 (사진없음)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최신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## 노동부, “감원을 최소화하는 경영위기 극복 지원에 최선”

- 생산규모 감축이 예상되는 중소하청업체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확대
- 본부 「노동시장위기관리 T/F」 출범에 이어 지방관서에도 경영위기 기업 지원을 위한 신속대응 시스템도 가동

- 원청업체의 생산중단 등으로 생산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한 중소하청업체도 감원 없이 일시적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
- 노동부는 재고량 증가, 매출액 감소 등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 왔지만,
  - 앞으로는 지침을 변경하여 원청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생산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하청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.
- ※ 고용유지지원금 '08.10월말 현재 집행액 : 247억원 → '09 예산안 (당초 323억원 → 457억원, 40%증액)

☞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 감소·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, 직업훈련,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와 훈련비를 지원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

- 이와 함께 노동부는 본부에 「노동시장위기관리 T/F」를 설치한데 이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도 「지역별 노동시장위기관리 T/F」를 가동하여
  - 구조조정 관련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영위기 기업 근로자의 고용불안 최소화와 노사관계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
  - 즉, 각 지방관서별로 지역 기업, 공단 등의 동향을 점검하고 경영위기에 직면해 고용조정을 모색하는 기업에 대해 노사간 대화를 활성화하고 노동부의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면서 경영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
- 이를 위해 노동부는 우선 일시적인 경영위기가 대규모 감원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들이 “고용유지지원금”이나 “유급휴가훈련”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.

☞ 유급휴가훈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주고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임금 일부와 훈련비 지원

- 특히, 고용조정 실시로 노사관계가 악화된 기업의 경우 노사간 대화에서 “고용유지지원금”이나 “유급휴가훈련”이 대안으로 논의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
- 본부 「노동시장 위기관리 T/F」 팀장이기도 한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“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구조조정을 모색하는 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 노사가 노동부의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영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동부 본부와 지방의 역량을 집중하겠다”고 밝혔다.

- 첨부자료 : 1. 구조조정관련 노동부 지원제도 개요  
2.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사례

**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지원제도 개요**

**1] 고용유지지원금**

◆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 지원

○ 지원요건

- 생산량 감소·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휴업·직업훈련·휴직·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

※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

○ 고용유지조치의 유형 및 지원 내용

① 휴업

- 1개월의 단위기간동안 당해 사업장의 휴업규모율이 1/15을 초과하는 휴업을 실시하고,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
-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/3(대규모기업 1/2) 지원

② 훈련

-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일 4시간, 총 20시간 이상의 적합한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
-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/4(대규모기업 2/3) 및 훈련비 지원

③ 휴직

-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·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
- 유급휴직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/3(대규모기업 1/2), 무급 휴직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(무급휴직중 훈련 참여시 훈련수당(최저임금의 70% 및 교통비 3만원) 및 훈련비 지원)

④ 인력재배치

- 시설·설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기존 사업장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60%이상을 전환업종에 재배치하는 경우
-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/4(대규모기업 2/3)

○ 지원기간

- 휴업·훈련·휴직은 총 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 (훈련은 90일 연장 지원 가능)
- 인력재배치는 완료일로부터 1년간 지원

○ 지급절차

-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(사업주) → 고용유지조치 실시(사업주) → 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(사업주) → 사실관계 확인후 지원금 지급(고용지원센터)

**2] 유급휴가훈련**

◆ 일감이 없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직업훈련을 시키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와 훈련비용 지원

○ 지원 요건

-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(연차유급휴가)를 제외하고, 유급(통상임금 이상)으로 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
  - 중소기업(우선지원대상기업) : 7일이상 유급휴가 + 30시간이상 훈련
  - 대규모기업 : 30일이상의 유급휴가 + 120시간이상 훈련

○ 훈련기관 : 직업능력개발시설·법인, 학원, 평생교육시설, 대학 등

○ 훈련과정 : 근로자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모든 훈련과정

○ 지원내용

- 훈련비용 : 노동부 고시 직종별 훈련비 기준단가에 의해 산정·지원
- 임금 :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의 150%, 대규모기업은 최저임금의 100%

### ③ 전직지원장려금

◆ 고용조정으로 이직(예정)하는 근로자가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전직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을 지원

- 지원 요건
  -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·정년·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했거나 이직예정인 자에게 전직에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제공
- 비용지원 대상
  - 사업주가 직접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시
    - 인건비,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시설의 임차료, 시설관리비, 교육훈련 비용 등
  - 전문컨설팅기관 위탁비용
    - 전직지원 비용지출 내역 검토후 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것으로 인정 되는 비용
- 지원수준
  - 전직지원 소요비용의 전부(대규모기업 2/3)
  - 지원상한액 : 전직지원서비스 이용자 수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
- 지급절차
  - 전직지원계획서 제출(사업주) → 계획 승인 및 통지(고용지원센터) →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및 장려금 신청(사업주) → 사실관계 확인후 지원금 지급(고용지원센터)

### < 첨부 2 >

####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사례

##### □ ○○정밀 : 인천시 남동구 소재

- 금형, 전자전기 제조업체로 '08. 3월부터 주거래처의 예상치 못한 발주물량의 급감 및 신규 발주물량 확보 곤란으로 정상적 조업이 어려워 6월부터 10월까지 6명에 대해 휴업을 실시하면서 고용유지(지원금 1,638만원 활용)
- 회사에서는 “사업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지원금을 활용하게 되었고, 원래 11월까지 휴업을 하려고 했으나 주문이 늘어 휴업대상자가 모두 복귀하여 회사가 정상화 되었다”고 함

##### □ ○○전기 : 부천시 원미구 소재

- 전구 및 램프를 제조하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2월부터 판매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7월부터 주문량이 급격히 줄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했으나 두 차례의 휴업을 통해 고용유지(지원금 1,465만원 활용)
- “회사에서는 가족같은 직원들이고 회사의 어려움을 직원들이 떠맡도록 할 수 없어 휴업을 통해 고용을 유지했다”고 함

##### □ ○○테크(주) : 대전시 대덕구 소재

- 금속가공제품 납품업체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주문량이 급감하였으나 감원대신 2008. 1~2월 근로자 8명에 대해 유급휴직을 실시하면서 고용 유지 (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금 742만원 지급)
- 회사에서는 “당시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여 직원들의 해고를 막을 수 있었다”고 하면서
- 최근에도 다시 경영이 악화되어 재차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여 감원을 피해볼 계획이라고 밝힘